

김동연 “신생기업 12만개 만들어 청년일자리 창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장·속도·맞춤형 규제혁신 할 것
공공금융기관 연대 보증제 폐지 등
창업실패자 재기에 출자전환 도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2만개의 기업을 만들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7일 서울 마포구 삼양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10만개 이상의 신기업 기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생기업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중국 베이징 중관촌 창업 거리를 방문한 이야기를 하며 “중국에서는 1년에 대학 졸업생 800만명이 나오고 연간 일자리 1100만개가 필요한데 중관촌에서 (창업으로) 기업 600만개가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 창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동연 부총리(오른쪽 세번째)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또 “현장·속도·맞춤형 규제혁신을 하겠다”며 “규제 저해요소인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

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지원 방식을 종합적인 관점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창업했다가 실패한 경우에 얻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를 경감하기 위해 “3월부터 공공금융기관 연대 보증제를 폐지하고 실패한 창업자가 재기하려는 경우 출자전환을 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뉴욕 주가 폭락에서 시작된 증시·환시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 불편을 느끼는 규제 50건을 발굴해 1분기 내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17건을 개선하는 등 연내 모두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경제 분야 현장규제 27건과 신서비스시장 활성화 관련 규제 14건, 행정·그림자 규제 9건 등이다.

특히 올해 안에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기업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가 50명 이상 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50명 미만 사업주에 한해 허용돼, 사업주가 본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고용 확대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2분기부터는 폐수배출 취급공장이라고 하더라도 폐수를 방류하지 않거나, 전량 재이용하거나, 다른 수계나 저수지 하류로 방류해 환경오염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저수지 상류 지역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앞으로 화물의 외부반출이 미미한 특수항만 건설시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해 6개월 이상의 사업 기간과 8000만원 이상의 용역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강원랜드 수사 관련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의압의혹 문제로 퇴장함에 따라 파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 외치더니... 임시국회는 공전

정쟁만 몰두해 비판의 목소리 커져

여야의 대치국면으로 2월 임시국회가 연일 파행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여야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에 따른 사퇴 요구 문제를 두고 강대강으로 대립했다.

자유한국당은 ‘의혹은 허위’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일부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 대통령 올림픽을 치르기보다 이 시간에도 오로지 제1야당의 국회의원을 때려잡는데 모든 기획과 실전을 하고 있다”며 “정쟁을 없애고 평창 올림픽을 치러내고자 하는 제1야당의 순수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산적한 법안들을 뒤로 미루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파행을 일삼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는 “구체적 증거는 하나도 없고, 모두 추측에 불과한 주장들을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대통령과 집권당이 나서서 국회를 파행시켰다”며 “일방적인 주장과 내부 고발이 제1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절대 변형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눈엣가시인 ‘권성동 죽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한 검사의 실제 없는 폭로를 정치쟁점화하여 무차별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권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게 유일하게 ‘갑질’한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제 대한민국 법치를 상대로 갑질을 하려고 한다”며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어떤 법률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길목을 막고 있는 자리에 딱하니 않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文대통령, 숨가쁜 외교 일정

캐나다·리투아니아와 잇단 정상회담

**캐나다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
리투아니아와 첨단기술·에너지 협력**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2014년 9월 당시 맺었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한·캐나다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중심으로 통상, 과학기술 등에서 다양한 협력을 유지해왔다.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와는 인프라, 에너지, 첨단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오전엔 줄리 파이예트 캐나다 총독, 오후엔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트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이들 국가와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엔 케르스티 칼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이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연일 ‘올림픽 외교’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8일이 하이라이트다. 이날엔 평창 올림픽 미국 대표단장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만찬도 함께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한평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도 접견한다. 또 같은 날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도 연이어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파이예트 캐나다 총독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줄리 파이예트 캐나다 총독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우주에서 촬영한 한반도 사진을 선물로 받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만난 자리에서 “캐나다가 한국 전 3대 파병국이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든든한 우방국”이라고 사의를 표하고 “아이스하키(세라 머리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감독이 캐나다 출신임)는 한국인에게 친근한 종목으로 6·25전쟁 때 얼어붙은 임진강에서 캐나다 군인들이 아이스하키 경기를 하며 항수를 달래고 전우애를 다졌다. 한국과 캐나다는 함께 피 흘리며 깊은 우정을 쌓아온 관계”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밝혔다.

캐나다는 영연방 국가로 내각(총리)의 요청으로 국가원수인 영국여왕이 총독을 임명한다. 총독은 여왕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역할을 하며 대외적으로 캐나다를 대표한다. 우주비행사 출신인 파이예트 총독은 지난해 10월 취임했다. 여성으로 4번째 캐나다 총독이다.

이번에 한국을 처음 찾은 파이예트 총독은 우주비행사 출신답게 문 대통령에게 우주에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한반도 사진을 선물했다. 파이예트 총독은 “우주선을 타고 한국을 바라보곤 했다”면서 “푸른 바다 위에 놓여져 있는 한반도를 바라보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은 하나”라고 말한 뒤 동계올림픽 경기종목 상징물이 들어 있는 은수저 세트를 답례품으로 건넸다.

오후에 진행된 문 대통령과 그리바우스카이트 리투아니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첨단 과학기술·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리투아니아는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해 에너지 자립을 위해 2014년에 자국의 클라이페다 항에 LNG 터미널을 건설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 터미널의 핵심 시설인 LNG 저장선 ‘인디펜던스(Independence)호’를 건조한 바 있다. 이는 3억30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김승호 기자

국민·바른정당 통합명 ‘바른미래당’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만드는 신당의 이름이 ‘바른미래당’으로 결정됐다. 양당 통합추진위원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통추위 대변인인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약칭 없이 ‘바른미래당’으로 할 것”이라면서 “당명 공모자 중 수상자를 선정해 오는 9일 PI(party identity·정당 이

미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지난번 당명 결정 때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제안했던 것”이라면서 “국민의당 쪽에서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빠지는 데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지만, 미래 지향이라는 취지를 살려 바른미래당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봉준 기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감사위원회 독립성 커진다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초안 공개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 기업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초안이 공개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회 정무위원장 김용태 의원실과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 제정을 위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안을 발표했다.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회계 투명성 제고 종합 대책과 올해 11월 시행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 실효성을 높이고자 만들어지는 자율 규범이다. 회계제도 개혁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 감사기구

가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제 역할과 책임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초안은 우선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 기업은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회사는 내부 감사부서도 함께 만들도록 권고했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준은 현행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동일한 것으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현행 상법보다 엄격하다. /이봉준 기자 bj35sea@